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우 KOC 총무, 박양우 문광부 차관,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2013 하계 U대회 유치 '시동'

정·재·체육계 214명 유치위 출범... 본격 활동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주도할 유치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9면〉

광주시는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과 유치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관계, 경제계, 체

육계 인사 등 21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유치위원장에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후원회장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명예위원장에, 박광태 광주시장은 집행위원장에 각각 추대됐다.

또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인 김종량 한양대 총장과 박상하 전 2003대구U대회 조직위집행위원장인 상임고문에,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등 8명은 명예고문에 위촉돼 중랑감을 더했다.

유치위원회를 주도할 집행위원회는 김창준 자유ENC 대표와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정재 전남대 총장, 전호종 조선대 총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희범 유치위원장은 이날 "2013년 U대회 광주 유치는 위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이 어우러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박삼구 후원회장은 "광주가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광태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열망과 정부의 확고한 지원, 위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U대회 광주 유치를 이뤄내 한반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의 제전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유치위원회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U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의 유치활동과 대회 유치 불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실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정홍식기자 who@kwangju.co.kr

특별재난지역 지정 '차일피일'

전남 서해안 지역의 타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늦어지면 서양식 어린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양식 어린이들에 따르면 전남 서해안 타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당초 지난 15일, 늦어도 16일께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서해안 김양식 어린이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늦춰짐에 따라 외딴섬 타르 제거작업 지원은 물론 자칫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수도 흔들기' 들끓는 광주

亞문화중심도시조성위 폐지 방침

"지역 미래 걸린 사업 차질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폐지대상 위원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포함시킴에 따라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 시민들과 광주시 주무부서 관계자들, 지역 문화예술인과 상공인들은 "문화산업을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으아가고 있는 지금, 새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되레 전담기구를

폐지한다니 충격적이다"며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416개에 달했던 각종 위원회는 205개로 감축될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정부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폐지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했던 12개의 국정과제 위원회 가운데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달 말 열리는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29조(조성사업 추진 기구)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도 이날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수위측의 조성위 폐지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조성위를 보완할 시스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국정과제위원회에 포함됐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폐지는 국가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의 협력

과 지원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폐지는 문광부 내에 설치돼 있는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 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커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수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에 광주지역 여론도 들끓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므로 정치권과 지역민이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완화 검토

"지역 경제 초토화" 반발

광주시·전남도·지역 경제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자총액 제한도 폐지에 이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광주·전남도와 지역 경제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외자 투자유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지역에 기업과 인력들의 수도권 러시가 예상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수위는 17일 수도권 집중억제를 명분으로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공장설립, 금융·통신·교육규제 등 정책 규제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으며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시장·기술변화에 따른 규제제도 연동 등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수위의 움직임에 대해 광주·전남 등 지자체와 경제단체들은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과 지방산업

경제의 심각한 손실발생을 우려한다'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검토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 광주·전남지역으로 기업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투자와 육성방안이 마련된 뒤에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동

▲공장총량제(工場總量制)=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인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1994년부터 시행됐다.

남권(부산·경남), 서남권(광주·전남) 등 5대 광역권으로 설정, 권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월 1일 광주월도합력가맹사업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

유망학원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